

인터뷰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주정 일 공동대표

“외국은 이미 어린이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협회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매년 4백억원을 웃돌아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정일씨(여 68·전 숙대교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

소로 각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는 당사국이 되고 최초보고서를 내는 동안 정부가 얼마나 조약 이행에 노력했는가를 반문하며 언론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데 대해서도 섭섭해 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세계적이라는 ‘교육열’ 덕분에 유복하게 자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어른의 놀이개라고나 할까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1주일에 1시간씩 놀게 해주면 대부분 한 두달만에 효과를 보게된다는 것.

“핵가족이 늘고 이혼도 급증

“어린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조약에 가입하고 정부보고서를 낸 지 얼마아말로 어른들이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것.

“국제조약의 가입당사국이 된 것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어길 때는 국제재판

요.”

부모의 바람과 다를 수도 있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이들의 바람을 채우는 것이아말로 아동의 인권 보호의 출발이라는 것. 그는 정서장애 아동(그는 마음이 아픈 어린이라고 표현한다)을 돌보는 원광아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이

하면서 어린이·청소년 문제가 삭막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 준비교육, 사전(예비)부모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가정교육과와 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 한 그는 부군 정범모(69, 한림대 총장)씨와의 사이에 4남매를 두고 있다. / 박

결손가정 어린이 정부도 외면

아동·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가칭)' 결성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아동권익보호 정책에 재검토가 요청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복지정책의 대상은, 소년소녀가장과 요보호아동. 정부는 이들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가 베푸는 혜택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어서 그들이 '홀로서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요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 성년으로서 홀로 생활해야 한다. 또 소년소녀가장은 성년이 아니면서도 가정을 꾸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학비지원에 있어 실업고교에 그친다.

전문대나 일반대학에 진학 경우 학비는 본인 부담.

이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전국에 자립지원센터(취업정보스에 해당)가 6개소, 자립생활관(임시 숙소)이 8개소 설치돼 있으나 그 수가 적어 수혜자는 제한돼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8세가 된 아동들이 퇴소할 때 1인당 1백만원의 자립금을 받게 되지만 이들이 취업해서 처음 손에 쥐게 되는 월급이 고작 30만원인데다 대개 평균 40만원 정도를 받는 직장에 다닌다"며 "자립금과 월급으로는 방보증이나 하숙비에 도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보호법을 제정, 그들이 완전한 성인으로서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아동권익보호 운동 나서



기아, 미아, 가출아동이 모여사는 대방동 서울시립아동 상담소 놀이에 열중하고 있지만 애정의 손길이 아쉬운 아이들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요보호아동(기·미아 및 가출아)은 6천2백7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93년의 4천4백51명에 비해 41%나 증가한 수치다. 94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기아는 3천1백69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아 2천9백19명(46.5%), 미아 1백92명(3.1%)의 순이다. 기아나 미아는 줄고 있으나 가출아 수가 급증한 것이 수를 불리는데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아 중 미혼모가 버린 경우도 1천7백81명(56.2%)에 달해 여전히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

요보호아동은 귀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입양되거나 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되지 못한 보호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요보호아동 1만9천2백14명은 전국 2백75개소의 극공립 복지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다. 올해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2백51억8천3백만원. 이것도 시설 운영비의 90%뿐이어서 나머지는 복지시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복지혜택 범위·수준 낮아 홀로서기 '별따기' 정부, '국제조약' 안 지켜...자립기반 마련해야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며 "아동들이 자기의사를 밝힐 수 없는 연령인데도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복지대상증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부족한 환경속에서 온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해 비행청소년이 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며 "미래를 내다본다면 아동복지정책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소년소녀가장(양친이 없어 20세가 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택아동)은 복지부에 따르면 94년 말 현재 7천5백40세대 1만4천3백72명이다.

정부는 올해 이들에게 41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한명당 월평균 국민학생 9만2천1백50원, 중학생 14만2천9백80원, 고등학생 17만2천5백10원이 주어지는 셈이다. 지난해에 비해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가 신설됐지만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여전히 무거울 뿐이다.

점차 국내입양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고 이쁜 아이들만 원한다. 반면 국외입양증 장애아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84년에는 국외입양아의 24%가 장애아였으며 92·93년에는 53%, 52%를 차지했다. 94년 현재 국내로는 303명, 해외로는 990명의 아이들이 입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5년 해리 홀트가 혼혈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발로 현재까지 1만5천명을 국내로, 6만5천명을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인도했다.

입양되기 전 몇개월동안 아이들은 위탁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위탁가정은 전국적으로 500여곳. 위탁부모도 매년 발생하는 기아수트 브건대 한참 모자란다. 위탁가정은 매일 8천원의 양육비 복지시설로부터 받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부모는 그간의 양육비로 1백만원(국내)이나 4천불(해외)을 낸다.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영구수용시설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부산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영구수용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주장애아동으로 영아에서 40세까지 연령분포도 넓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관계자는 장애아를 입양하는 국내가정이 많고 미혼모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아에게 전문가나 간호사를 연결해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미혼모에게도 정부지원이 있어야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소년소녀가장이나 요보호아동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호적상으로는 후견인이 있거나 부모들의 가난과 병 그리고 출생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결손아동은 정부로부터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들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펴는 부스리기 선교회(총무 강명순)에 따르면 이같은 결손아동은 전국적으로 4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 알콜중독, 도박, 의도, 구타, 무능력, 가출한 경우, 어머니가 사망, 가출한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도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거나 무학, 알콜중독이어서 아이들이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 부모가 이혼편견수술하에서 자란다거나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에도 이 발생한다. 이외에 부모가 이거나 혼혈아인 경우도 있다. 이같은 가정환경에서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은 정서불안, 학업실패, 가출경험, 나쁜 생활습관, 가족에 대한 적대감 등을 갖는다.

부스리기선교회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결손아동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이들도 정부의 복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은 "정부는 연간 보호대상자 수를 일정수준으로 고정시켜 놓고 호적상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원대상의 근거로 삼는 등 법집행에 있어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며 "호적상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① /이은영 기자

95년 3월 25일

주간 시민의 신문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치르기로 한 지방 선거의 "내 한표"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가 걸려 있다.

깊게 낚긴 채로 실패했다.

그러나 김 영삼 대통령은 아직도 선거의 탈-정치를 지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이는 "지방 선거는 정치인 아닌 살림꾼을 뽑는 것"이라며, "언론이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김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야당의 주장대로 일종의 선거 운동인지도 모른다. 행정가나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내세워 야당과 경쟁하면, 인물 빈곤을 겪는 야당을 궁지에 몰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음직한 것이다. 아무래도 여당은 관료 출신 같은 전문가들

을 영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말이다.

김 영삼 대통령의 탈-정치 발언에 뒤이어, 야당이 김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치인을 서울 시장과 각 도지사에 임명한 그이의 전력을 공격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김 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은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지난 달 이십일 일 저녁에는 김대통령이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전원을 청와대에 불러 모아 대규모의 만찬을 가졌다. 그 모임에 앞서 그날 낮에는 시도지부장 연석 회의와 의원-지구당 위원장 연석회를 열어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김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을 격려하자는 뜻으로 이날 만찬을 마련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민자당 관계자들을 성원했다. 김 대통령이 이번 지방 선거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이춘구 대표는 더 적극적이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지구당 위원장 책임 득표제"를 내세우면서 그 결과를 총선 공천에 연결시켰다고 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 이대표는 김 대통령과 이백육십명의 민자당 간부들 앞에서 "지방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다짐했다고 한다.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이번 지방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 자치 제도를 완비한다는 사실이 손꼽히는 의미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대충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또 현실 정치적으로 이 선거는 무겁디 무거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만일 민자당이 크게 지면 정계의 개편은 필연적이다. 삼당 합당으로 일개가 짜인 정국의 구도가 와르르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삼당 합당의 민자당이 지역주의를 기초로 한 지역 연합의 모습이었다면, 정계 개편을 통한 그 당의 와해는 지역 분립의 정국 구도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그러한 정치의 진행이 어차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의 하나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번 선거는 정치가 크게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지방 선거의 의미에 천착하며 그 진행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김 근한(경계 신문 논설위원)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 회의”
유엔도 관심할 우리 아이 인권

지난달 십오일에 동승동 흥사단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칠, 팔십년대 우리 정부의 인권 상황을 생생히 웅변했고 지금은 "인권 운동 사랑방"을 열고 있는 서씨 형제 중의 한 사람인 서준식 씨, 만날 때마다 간디의 영상을 떠올리게 된다는 증명을

듣는 "재야", "인권" 변호사 한승헌 씨, 북한 쌀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오랫동안 유엔의 일을 해온 서울 평화 교육 센터의 이윤구 씨,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던 전 숙대 교수인 이동화자 주정일 씨의 면면들이 보였다.

평생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우리말 쓰기를 연구해 온 이 오덕 선생은 이 모임의 공동 대표이지만 몸이 불편해서 불참한다는 방승이 나왔다. 이날 모임의 공식 명칭은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 회의 결성식"이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얼굴만 보아도 모임의 성격이 대개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만했다.

지난 팔십구년 유엔 총회는 "아동의 권리 조약"이란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구십일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여 거기 가입했다.

이 "아동의 권리 조약"은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범을 정의할 뿐 아니라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함께 포괄한 "유일한 국제 인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를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못박은 점, 인간 권리에 대한 그간의 지혜를 총결집하여 만든, 가장 최신의 인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약"이라는 찬사도 받아 왔다.

이 조약에 비준한 나라는 현재 세계 백칠십몇개 나라이다.

국제 인권 "조약"은 인권 "선언"과는 달라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면 위원회가 그걸 심사한다. 심사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위해 위원회는 해당국의 민간 단체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줄곧 '권리'라는 개념을 붙잡고 일해 온" 서준식 씨의 분석에 따르면 칠십년대부터 국제 인권 문제에는 두 가지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 한다. 첫째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이 내정 간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고, 둘째, 정부 대표단 힘이 있던 유엔에서 민간 단체의 발언권이 세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

보다 민간 단체의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인데, 이 "아동 권리 조약"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 보고 검토 전에 유엔은 민간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반드시 읽어 보기를 원한다.

유엔에서 "아동 권리 조약"을 채택한 배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해가는 아동 환경의 악화에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오세 미만 아동이 해마다 천사백만이나 죽어가며 절대 빈곤 아래 있는 아동도 일억오천만에 이른다고 한다. 선진국이라고 아동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육체적 학대, 마약, 성적 착취, 소년 범죄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결코 낙관할 수가 없다. 최근 한 주간 잡지("주간 한국, 구십사년 시월 이십칠일치)의 통계를 보면 서울 남부 지역 국민학교 어린이 중에 한 학급의 삼분의 일이 결손 가정이라는 놀라운 보고가 있고, 인신 매매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져 십이삼세 아이들을 납치해 유흥업소에 넘긴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들린다.

현재 사십팔만의 청소년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십만의 청소년이 실형을 받고 감화원,

【며도는 소리】

케네디 대신 후르시초프라면?

런던에서의 한 뉴스 회견에서 기자가 고르바초프에게 물었다.

"고르바초프 선생, 천구백육십삼년에 케네디 대신 후르시초프가 암살당했다면, 세계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고르바초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랬더라도, 오! 시스가 후르시초프의 부인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육의 힘

한 남자가 자기 집의 엄청난 거액의 청소부 이즘마를 해고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줌마! 어떤 책상 위 먼지에다 내 이름까지 쓸 수 있을 지경이에요."
그 말은 들은 천연덕스런 이 아줌마는, "어쩔! 정말 교육의 힘은 대단해요."

선생님, 앞문 열렸어요

여학교에서 한 남자 선생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남대문이 열려 있었다. 귀속말로 속다가리던 여학생들 중에 한명이 마침내 손을 들고 말했다.

"선생님, 앞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아 주변 나와서 앞문 닫고 와."

세계 들지

한 남자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티코를 몰고 가는데 커다란 그랜저를 몰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급 커브를 돌아 돌진해 왔다. 남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욕을 하려는데 여자가 먼저 "돼지!" 하고는 자나가 버렸다. 화가 난 남자가 뒤에 대고는 "암소!" 하고 소리를 치고는 급커브를 돌자마자 엄청난 큰 돼지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다.

공동 묘지에서

중조할아버지 성묘를 갔을 때였다. 공동 묘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들 무거운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엄숙한 분위기를 관리 사무소의 플랜카드가 깨 버렸다.
"관리비 제때 납부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 날에 살던 아이는 컴퓨터 통신 하이텔과 천리안, "유어람"에 오를 것에서 기어 올른 것이다. - 편집자

한권으로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아시아의 어느 문명 국가에서도 제 나라의 문법을 현대 이론에 따라 이만큼 반대하고 자상하게 다룬 책이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글자, 글자, 글자로 뿔뿔한 페이지의 수요가 자그마치 천오백에 가깝습니다. 참고한 국내의 학자들의 문헌도 자그마치 3,000 가지 가까이 됩니다.

질리겠다고요? 골치 아프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어학자, 국문학자,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쉽디 쉽습니다. 실사 국문학교만 나왔다고 치더라도 어려운 말과 표현의 해방으로 지적인 호기심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쉽고도 조리있게 쓰여진 책이 이것입니다.

영어, 일어라면 또 몰라도 "한국말"은 다 안다고요? 문법이 자기 연구 분야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 기나긴 것을 읽어 두느냐고요? 칠천만 겨레가 국어를 다 알고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다들 다르게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더 조리있게 하고 글을 더 번뜩이게 써서 사회의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흔히 자기 분야 전문 지식이 높은 것이 무색하게 말과 글을 호리명렁하게, 일송달송하게 하고 쓰고 합니다. 국어 문법 공부에, 영문법 공부에 쏟을 정성의 일 퍼센트만 쏟았더라도 모면할 처지입니다.

국어를 "아는" 사람, 국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 곧 소설가, 시인, 국어 교사와 교수, 극작가 말고도 대통령부터 학생들까지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었거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번은 탐독해 두어야 할 책이 이것입니다. 전통 문법책처럼 무슨 골치 아픈 단어나 외게 하는 책이 아니라, 국어의 짜임새를 쉽디 쉬운 첨단 분석 방법에 따라 원히 이해하여 마음 속에 갖추어 두고 발언, 연설, 집필, 사교 입시, 성공에 응용하게 하는 책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해외 동포나 해외의 한국화 화도에게 "이것이 한국어다" 하고 부끄럽없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읽어 보고 "드디어 그 어렵던 한국어를 알아듣게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할 유일한 책이 이것일 줄로 압니다.

어느 집, 누구의 책장에 꽂혀 있어도 자랑스러울 뿐더러, 대물림할 수 있는 가보입니다. 손때가 묻은 뒤에도 고이 대물림할 수 있도록, 내용은 중성 종이에 찍었고, 표지 천은 특별히 미국에서 수입해 썼고, 제본은 "스마이드"식으로 단단히 했습니다.

초판을 2,000부 찍었는데, 나오자마자 벌써 1,100부가 나가 900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값은 한부에 ₩80,000입니다. 아마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책 한권일지 모릅니다만, 한정 붓수 출판, 천오백 페이지에 가까운 두께, 기나긴 기간의 편집 비용, 특수 재료 제본 같은 것을 감안하면 싸디 싸다고 여기실 줄로 압니다. 해외 친지에게 보내시는 경우가 아니면 발송 비용, 우편료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깜박 잊으시기 전에 이 잡지 194 페이지의 주문엽서로 발송을 분부하세요.

엽서로 신청하시면 지로 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책을 보내 드립니다. 혹시 이맥스 카드, 환은 비자 카드, 국민 카드, 비씨 카드 회원이시면 엽서의 해당 칸을 채우시어 자동 지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깊은나무
출판

발행 처/뿌리깊은나무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28 · 우편번호 136-012

소년원에 수감중이다. 강간법의 빈이 십대이며 십사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이년 사이에 칠십 퍼센트나 급증했고, 국고생의 사십오 퍼센트가, 중고생의 칠십사 퍼센트가 기출 충동을 느끼며, 청소년 팔십오 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대답한다.

우리나라 부부 일곱쌍 중에 한쌍이 이혼을 하는데 혼인 오년 안에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높아서 대개 한둘의 자녀를 두게 되는 그이들은, 아이의 양육을 서로에게 미루다가 포기해 버리는 일도 흔하다 한다. 이 버려진 아이들은 혼자 방치되거나 아동 복지 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부스러기 선교회" 강 명순 총무의 조사 내용)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유엔의 "아동 권리 조약"에 가입한 것은 박수칠 만한 일이다. 이 조약에는 어른들이 "아동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함이 담겨 있다. 더 늦어서는 안 되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초조감도 엿보인다.

그래서 관련 민간 단체 열대여섯이 모여서 결성한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 회의"의 탄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우선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고, 아동 문제에 관한 정부, 민간 단체간 토론회도 열고, 출판, 홍보 사업도 벌이며, 정부가 아동 인권을 위해 과연 유엔에 제출한 내용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보조도 할 예정이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정부를 반박하고 비판



서울의 흥사단에서
결성식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
회의"는 유엔이 그
발언에 관심할
비중있는 아동 권리
감시 단체가 될 터이다.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 회의" 사진)

해서 망신을 주자는 게 결코 아니라, 정부 보고서가 얼마나 진실인지 미리 검토하고 토론하고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아이들이 진정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데에 앞장서려는 것이다.

예로부터 노예와 여성과 아동은 권리 인정을 받기 어려운 신분이었다. 그들에게는 늘 "자비로운 보호자"가 존재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어 노예와 여성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걸 쟁취해 갔다. 그러나 어린이는 다르다. 스스로 권리 주장을 할 힘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동 권리 조약"(유엔에서 말하는 "차일드"란 십팔세 미만을 가리키므로 우리말 번역은 "어린이, 청소년"으로 통일했다)은 이십일 세기 인권 문제의 가장 첨예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 회의"의 활동 또한 그래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사실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은 물론, 나아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바꾸고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일까지, 앞으로 그 단체가 풀어야 할 숙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하기만 한 데 정부의 자발적인 힘은 당분간 두루 미치지 어려운 게 사실 이니까.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인권 운동 사랑방(전화 02-715-9185)으로 연락하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

김 서령/자유기교인

무속에 관한 짧은 명상

어느 수학 교수의 "굿"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밖에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는 무속 신앙은 그 대표되는 경우입니다.

하기야 무속은 현대에 걸맞는 종교는 아닙니다.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낡은 옛 모습을 너무 진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속 신앙을 실은 종교라고 부를 수도 없거나 종교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옛날 사람들이 무지해서 지녔던 원시적인 신앙, 아니면 아

예 미신이라고 해야 할 잘못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은 어서 없어져야 하고 아직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무속 신앙은 종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원시적입니다. 다듬어진 우주관이나 인간관도 없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고상하고 품위 있게 서술되지도 않습니다. 윤리적인 규범이 권위 있게 선포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굿이 벌어질 때에만 그러지 조직화되

거나 제도화되어 공동체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신앙은 무조건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어서 아무도 책임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득한 때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 해도 굿을 하거나 무당에 의지해서 자기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당이나 굿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굿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무당을 사제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 의사, 심리학자, 신비스러운 비범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무속 신앙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다 담고 있는 우리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무당의 굿을 빼 놓으면 우리 문화는 토대를 잃고 쓰러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속 신앙으로 우리 문화를 다 설명하려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속 신앙은 잘 보존되어야 하고,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 무당이나 굿이 자기 몫을 다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도 그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 다듬어진 종교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종교들이 우리의 속 깊은 정서를 다 담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든 유교든 그리스도교든 그 겹질

A7 24
-1

■ 유엔

어린이는 '대상' 아닌 '주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2차 회기 '제네바 회의' 참관기

류은숙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실무간사)

어린이의 권리라는 말을 대할 때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편견에 사로잡힌다. 하나는 어린이에 대한 모든 처우는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어른의 관심과 배려에서 우러나온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어린이 시기는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고민과 제약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때'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아이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어린이는 어른의 근심·걱정과 무관하게 배움과 여가 활동을 통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필요하냐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마스크의 뜨거운 조명을 받게 되는 어린이 관련 문제를 대할 때면 그 사실이 쉽게 잊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주 '별난' 개인이 저지른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치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한 조건'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린이에 대해서 매우 온정적이고 회생적이라는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어린이가 누리는 권리는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주어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회기 중 지난 18~19일에 한국 정부가 유엔에 낸 최초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 회의의 배경이 된 유엔아동권리조약(조약)은 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일치로 채택되어 현재 1백70여 나라가 비준한 조약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 정부는 91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고 94년 말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은, 정부측이 성장제일주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 권리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 결여, 과중한 입시 제도로 인한 어린이의 문화 활동 제약, 전통적으로 어린이를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 등을 솔직하게 시인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솔직한 자기 비판과,

특히 한국에서 어린이 '미성숙한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시인한 것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측의 자기 비판과 개선 노력 다짐에 대한 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조약 실행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과 조직 △어린이 관련 예산 비율 △임양·혼혈·장애 어린이와 학대받는 어린이 등 사회의 '음지'에 속한 문제 같은 각론에 들어가자 정부측 답변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백서 발간, 어린이학대방지법 제정, 결혼가정 치유센터 운영, 학교 인권교육 실시' 등 민간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한 반응도 정부 답변 내용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는 결국 정부측의 준비 소홀, 회의에 임하는 자세 태만, 어린이 권리에 대한 진지한 현실 인식 결여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탓일 것이다. 위원의 한 사람인 산투스 파이스 여사(포르투갈)는 회의를 마친 후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국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 정부에게 우리가 충분한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서 어린이는 '주체' 이지 결코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회의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은 1월26일(금)에 발표된다. ■

"어린이를 단순히 '미성숙한 성인'으로만 보지 말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 전 실무부와 모임에 한국 민간 대표로 참석한 이기범(숙명여대·맨 왼쪽)·노혜련(숭실대·왼쪽 두번째) 교수와 필자(왼쪽 네번째).



“당신 자녀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회의 참관기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

'95년 11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센터의 아동권리위원회 실무회의가 열렸다. 본지에서는 회의 참관기 형식을 빌어 유엔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과 조약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글을 실는다.

유엔은 1989년에 국제사회가 그리고 각국이 적용해야 할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어린이 권리조약)을 제정함으로써 18세 미만 어린이를 권리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법적 기준 및 지을 마련했다. 어린이 권리조약은 1924년에 국제연맹이 채택한 '제네바 어린이 권리선언' 이래 65년만에, 그리고 1959년의 유엔 '어린이 권리선언' 이래 30년만에 유엔이 채택한 것이다. 이 조약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 없이 전폭적 지지로 채택됐을 정도로 다른 어떤 조약보다도 호응이 좋았고, 1995년 11월 현재 소말리아 등 8개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준했다(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2월에 비준).

정부 보고서와 연대회의 활동

어린이 권리조약은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속에는 어린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은 어린이의 보호에서 어린이의 평등과 자율성 존중으로, 양육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에서 자결권이 있는 어린이로, 그리고 복지를 위한 어린이 권리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어린이 권리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

어린이의 권리보장은 각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책임이지만 그 일차적 책임은 해당 정부에 있다. 그래서 유엔은 조약 체결국들의 어린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해당 정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4년 11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 보고서 제출은 어린이의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정부가 어린이 인권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과 그 상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지 표명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가 우리 국내 법과 정책의 틀에 매이기보다는 어린이 권리조약과 일

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수정하겠다
적극적 의지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보고서는 "어린이는 양육의
일 뿐이며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있
지 못하다"는 우리사회의 보수적 인식은
지적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방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어린이 권리
보장의 책임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고
정부는 단지 보조자라는 입장이다. 인권상
의 과약은 관련 법조문의 나열에 그쳤
고 개선을 위한 명확한 목표 제시도 부족
하며 따라서 그 실현을 위한 사법, 행정 절
제 마련과 예산편성 방안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유엔에 제출하는 정부 보고서들
의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유
엔 어린이 권리위원회는 UNICEF(국제아
동기금)와 조약 실행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자격있는 조직(other
competent bodies)의 대안보고서 제출을 장
려한다. 다양한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조약
실행을 위한 정확한 권고를 해당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이하 연
대회의)는 어린이 권리조약 홍보를 목적으
로 또 어린이 인권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정부 보고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인 권고를 개진하기 위한 대안보고서 준비
를 목적으로 지난 해 3월 결성됐다. 어린이
의 권리, 교육과 복지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주정일, 이오덕, 한승헌, 이윤구 선
생을 공동대표로 14개의 주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몇
몇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에서는 내
실무대표를,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씨가 간사를 맡고 있다.

연대회의의 활동은 어린이 권리조약 홍보
를 위해 『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어린이 인권 관련 기사를
재했고, 2만 장의 홍보지를 어린이날에
부모, 교사, 어린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대안
보고서를 위한 정보수집과 집필은 참여 단
체와 개인이 각기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원
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
양육,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
화적 활동 그리고 특별보호조치로 구분해
진행했다. 우리말본을 영역해 지난 해 7월에
유엔으로 보냈고, 지난 해 11월 제네바 실
무회의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권리

조약 이행 실태를 설명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됐다. 연대
회의 보고서는, 1992년 유엔의 자유권 조
약, 1995년 사회권 조약에 대해 한국의 민
간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해 성과를 얻은
데 이어 한국 민간단체로는 세번째로 유엔
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제네바 회의 준비와 참석

제네바 실무회의에는 나와 노혜련 교수
(승실대), 류은숙 간사가 참가했다. 회의
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첫째, 유엔에 보낸 연대회의 보고서가 축
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문수정본을
다시 만들었고 둘째, 다른 인권조약의 실
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경험을 참고했
고 셋째,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
로 하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심각하거
나 시급한 사안들을 회의에서 부각시키기
위해 발표문을 별도로 작성하는 일이 중심
이 됐다.

나뿐 아니라 노혜련 교수도 학기중에 떠
나야 했기에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11
월 18일 출국해 회의 당일 새벽까지 준비
에 매달려야 했다. 발표는 약 20분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 전날 만났던 한국
담당위원 파이스 씨가 시간을 40분 정도로
배려할 수 있다고 해 별도의 준비를 해야
했다. 회의 참가 목표가 정부와 소모적 논
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의 권
리를 증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권고
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의견
을 담은 발표를 준비했다. 이미 보낸 보고
서에 대한 파이스 씨와 어린이 권리조약의
민간단체위원회 논평이 많은 도움이 됐다.

11월 22일의 실무회의는 예정보다 늦은
10시 45분에 시작됐다. 10명의 위원 중 6명
의 위원이 참석했고 의장은 순서에 의해
필리핀의 유페미오 씨가 맡았다. 그리고
유엔 인권센터 담당관 2인, 한국UNICEF를
대신해 참석한 유럽UNICEF 담당관, 그리
고 UNHCR(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담당
관이 참석했다. 먼저 UNICEF에서 한국
UNICEF가 보낸 우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서를 대독했는데, 대체로 우리 보고서의
지적과 권고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UNHCR의 담당관이 난민과 그 자녀에 대
한 우리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을 지적했

다. 정부 보고서는 물론 연대회의의 보고서
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자국민
의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사안인
난민 수용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후 연대회의의 발표와
한국 담당위원의 정부 보고서와 우리 보고
서에 대한 논평, 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대회의의 발표는 정부 보고서와 조약 이
행 실태에 관한 일반적 논평, 주요 사안들,
그리고 권고로 구성됐다. 일반적 논평에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첫째, 정
부가 조약을 홍보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노
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조약을 어린
이 인권관련 법과 제도의 근거로 인식해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사회의 각종 차
별을 줄이기 위해,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조약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 넷째, 조약 이행에
관련된 행정부서와 그 업무를 통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앙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논평 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과 권고를 제시했는데, 이미 제출한
연대회의의 보고서 내용을 가능하면 빠짐
없이 다루었다. 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우리사회에서 평소 심각하게 생
각하고 있지 않지만 발표에서 부각시킨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인권과 복
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입안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어린이 사회지표의
정기적인 조사, 발표 둘째, 1993년 현재 교
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98%에 이르고
있는 어린이(14세 이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셋째,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문화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가족
구조의 변화(이혼부모, 미혼모 취업모 증
가) 속에서 어린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특별히 1993년 현재 7,322세
대에 이르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위해 최저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조) 넷째, 존재조차 잘 알
려지지 않은 혼혈아 그리고 출생 전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여아 등 차별로 인
해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다섯째,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
대와 폭력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범죄자로부터
악영향을 받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가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연대회의의 발표에 이어 한국담당 파이스 위원의 논평이 있었다. 논평은 연대회의의 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와 구체적인 권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국 어린이의 인권상황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로 시작했다. 조약 이행에 관해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수준에 어린이 인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정부가 정치적 의지는 가지고 있고 한국사회도 어린이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약 각 조항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히 한국정부가 유보한 세 가지 조항은 한국사회가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와 사회의 참여자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교육, 조약 이행을 위한 중앙기구의 신설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의 구체적 질문과 토의

다음에는 각 위원의 논평과 질의 그리고 우리측 대표들의 응답이 있었다.

나머지 위원들의 논평도 기본적으로는 연대회의의 보고서와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각 위원들이 자국뿐 아니라 세계의 어린이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 질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와 교사의 자유 보장 정도, 학업 부담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률, 학습 부적응 아동의 상담, 교육개혁의 내용, 어린이의 정신요양소 입원



제네바 실무회의장에서 왼쪽부터 노혜련 교수, 필자, 한 사람 건너 류은숙 간사.

조약 이행에 관해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수준에 어린이 인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한국사회가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와 사회의 참여자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나 보호 결정시 그 객관성과 어린이의 의지 존중 여부,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존재 여부와 역할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토의를 끝으로 예정시간 12시를 조금 넘겨서 실무회의가 끝났다.

여기서 일일이 토의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의과정에서 어린이 인권뿐 아니라 우리사회 인권보장을 위한 노

력에 공통 고민이 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첫째 질문은 우리사회의 인권, 복지, 교육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설명하고 평가할 때 그 준거는 무엇이 되어야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집트 출신 위원인 바드란 씨가 한국의 인권, 복지, 교육 수준을 각종 지표로 판단하자면 낙관적인 수준인데 연대회의의 견해가 너무 비판적이지 않느냐는 논평이 그

갈등을 잘 드러내준다. 물론 국제사회 우리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는 쉽지 않다.

이번 경우 우리는 그간 향상된 영역도 정하되, 바뀌어야 할 기본인식과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회분야의 중요성의 인식만큼 아직 권, 복지,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정부나 사회에서 충분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고, 각종 지표와 실제의 차이를 지적했으며, 또 많은 제3세계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들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각 위원들에게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실정과 문제를 알리고 연대회의 권고수준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국제사회에서 국내 인권상황을 더 효과적이고 타당하게 설명하고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개발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질문은 주로 서구 문화와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유엔의 인권조약과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조화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은 스웨덴 출생 위원인 하마버그 씨에 의해 제기됐다. 어린이 권리조약은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정치적, 시민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우리사회에서 그러한 철학과 그 철학에 바탕하고 있는 각종 권리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사회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인권조약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 비준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연대회의의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문제는 바로 우리 정부가 조약과 문화의 갈등을 하고 외면하는 데 있다. 연대회의가 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제시했던 방안은 조약의 기본철학을 이루고 서구문화와 한 문화가 공유하고 있으나 그 실현방식은 다른 어린이에 대한 사회정서를 찾아내어 정서를 존중하면서 정서의 표현방식을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시

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다른 어떤 사회 못지않은데, 그 사랑의 실현방식이 어른 육구의 일방적인 강요에서 어린이의 육구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기 아이만을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어린이 모두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만큼, 어린이 권리조약과 우리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차원의 교육과 토론의 장이 꾸준히 마련돼야 한다. 서구의 전통 속에서 규정된 인권과 복지를 우리의 전통과 문화 틀 안에서 수용하는 것은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정부,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

나는 평소 유엔이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 유엔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논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보고서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유엔의 해당 정부에 대한 권고도 그 정부가 형식적으로 접수하고 실제적으로는 무시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유엔의 관계도 바로 나의 이러한 선입견에 기여한 사례 중 하나다. 이번 회의의 참석에서 나의 선입견이 편견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말한 유엔의 제한사항 외의 느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과 얼마간 머무르면 별생각 없어 질 것 같은 제네바의 평온과 안락함 사이에서 매꾸기 어려운 실존적 괴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린이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의 진보를 위해 결국 정부와 민간의 역할 뿐 아니라 유엔의 일정한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이 느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사회발전을 인정받고 지도적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인권조약의 준수와 유엔의 권고에 그 전보다는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의 인권관련 민간단체 역량의 성장이다. 국내의 민간단체들

은 유엔이 정부에 타당한 내용을 권고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국내 인권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권고안을 유엔에 적시에 제공하고 또 정부의 유엔 권고안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민간단체가 정부와 유엔이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도록 만드는 견제세력 혹은 정부의 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생산적인 동반자로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단체들이 생산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위해, 유엔의 각 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망이 형성돼야 한다. 각 인권조약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관된 내용의 국내 사정과 권고안을 유엔에 제시하고 정부의 조약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 회의 참가에 앞서 이미 유엔 인권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조언과 자료를 참고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더 나아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각 인권조약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하고 연관되는 각 조항의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하겠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인권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전문가의 저변은 두텁지 못하다. 더욱이 인권 전반의 전문성과 어린이 인권의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찾기는 마치 병원에서 의과 전문의 가운데 소아의과 전문의 찾기도 더 어려운 실정이다.

연대회의의 보고서와 이번 회의의 발표는 회의 후 이례적으로 위원들이 점심식사 제의를 하고 두 시간 가까이 더 이야기를 나눌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의 오랜 현장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다. 대표단 구성도 복지, 교육, 사회운동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야의 구색을 갖춘 것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개념과 조약의 틀 안에서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실무자와 전문가가 요구된다. 인권단체의 연대는 인권의 개선 그 자체는 물론 바로 그를 위한 인적 자원, 즉 실무자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 인권전문가와 실무자의 저변과 저력이 바로 그 사회 인권의 수준이다. ㉞

얼마나 어린이를 존중합니까?

'연대회의' 유엔에 한국 어린이 인권침해 상황 보고

미성년자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 만은 아니다. 그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 채택돼 90년 발효된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94년 현재 1백68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91년 12월 이 조약을 비준했고, 지난 94년 10월에는 최초의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조약은 가입 2년 이내에, 그리고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철저히 존중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공식 답변은 "아니다"다.

정부보고서 진실성에 의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이운구 주정일 한승헌·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7월 7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라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이하 보고서)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그룹'(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발송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공동육아연구회' 등 아동·인권 관련 21개 민간단체로 짜인 '연대회의'가 따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정부보고서가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상황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실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 할 이 보고서는 민간단체(NGO)들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1차 연례회의(96년 1월 예정)에 앞서 오는 11월 열릴 사전 실무회의에서 한국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 '연대회의'도 대표를 파견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정부 보고서의 진실성을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사전 실무회의를 거쳐 내년 본회의에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정부에 상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학교에서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과 관련한 올바른 교육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지난 92년의 자유권조약과 올초의 사회권조약 민간보고서에 이어 민간부문에 의해 세번째로 유엔에 제출된 인권관련 보고서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개 민간단체와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 교수 등 10여명의 필진이 힘을 모은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할 27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권고에 앞서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정비와 인권조약의 대국민 홍보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조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학교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인권교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현장활동 경험과 각종 통계수치를 근거로 '보고서'에 담은 주요 권고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와 교육, 복지 보장의 책임은 가족에 앞서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고 조약에 따라 관련 국내법을 정비할 것. 아동학대 신고제 마련, 보육시설 확충과 예산편성, 학교에서 인권교육 실시, 집회·결사 등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착취 방지, 소년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구금장소를 소년 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차별화할 것 등이다.

'연대회의'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씨는 "정부보고서는 인권조약의 기본 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고서는 현장에서 모은 사례에 기초해 아동인권 전반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15일 결성돼 소속단체 연구자와 현장활동가들의 토론 등을 거쳐 석달 동안 영문본, 한글본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그간의 활동상황과 정부 민간보고서를 종합한 자료집 발간, 정부대표와의 토론회 제안, 오는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에 대표단 파견, 어린이·청소년 인권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등을 결구 확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스스로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한 '조약'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결구 예정이다. 22

이재훈 기자



4/4 (17) 중앙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7개 항목 한국에 권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개선해야 할 중점사항들이 제시됐다.

내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실무분과회의(11월20~24일)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현·이오덕·이윤구·주정일)측이 전해온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두 27가지로 나타났다.

주요 권고 사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정비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도록 어린이의 도로접근권 보장 ▶부모교육프로그램, 기출 어린이 쉼터, 가정복귀를 돕는 치유센터 등을 마련해 가정결손 예방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법 절차 강화 및 아동학대신고제도 마련 ▶아동중심 보육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 ▶학교에서 인권교육 실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청소년과 일반 형사법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 선의(先議)제를 신설하고 청소년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기존 소년원 등으로 차별화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참여 보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학대·성폭력을 막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공동조직 설립 등이다.

유엔 아동 권리조약 채택 배경

지구촌 어린이 인권은 어디에

어른 횡포에 미국서만 하루 20명 목숨 잃어

총격에 따른 부상으로 사망하는 미국 어린이는 연간 7천명. 브라질에서는 매일 4명의 어린이가 살해되고 40만명의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력충돌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무려 1백50만명이나 되고, 타이와 스리랑카 및 필리핀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 어린이는 50만명을 헤아린다.

이 끔찍한 숫자들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유엔 사회개발정상회담(WSSD)에서 다뤄졌던 아동학대에 관한 통계들이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해 가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유엔이 '아동의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한 배경.

권리조약은 지난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90년 9월 비준국이 20개국을 넘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는 어린이의 지위향상을 위한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정의할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함께 포괄한 것으로 95년 현재 1백70여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는 91년 11월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동년 12월부터 조약의 당사국이 됐다.

조약은 전문과 일반 규정(1-5조), 실질적 권리 내용(6-41조), 국제적 실시 조치(42조-54조) 등 3부 5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모든 아동(만 18세 이하)에게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3조) 등이 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생활의 보호(16조), 정보 접근권(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37조) 등을 명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 지난 15일 서울 홍사단 강당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은 △당사국은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릴 의무를 진다(42조) △유엔에 아동권리 위원회를 수립, 가입국의 진전 상황을 감시한다. △당사국은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개선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다 제출한다(44조) 등 실시 조치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조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44조 규정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 내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유엔이 정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은 이를 계기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걸맞게 정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보고서

는 조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 위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동 인권상황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별도 보고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엔 위원회도 심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민간단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결성식에서 "정부보고서는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해 권리 보장이라는 조약의 기본취지를 반영하기는 부족하다"며 "아동의 권리 실태에 대한 자료와 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승운 기자

... 임무... 함, ... 임부... 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안
 을 열 배 이상 안전성을 개선해야
 주장은 나왔다. 장순홍 한국과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
 의 두 배가 넘는 2여기가 새로 건
 예상인 것을 고려하면 큰 재앙을
 인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10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력
 3, 냉각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며
 3 물질이 격납용기에서 벗어나지
 2를 심층 방어해야 한다"고 제시

... 임무... 함, ... 임부... 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안
 을 열 배 이상 안전성을 개선해야
 주장은 나왔다. 장순홍 한국과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
 의 두 배가 넘는 2여기가 새로 건
 예상인 것을 고려하면 큰 재앙을
 인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10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력
 3, 냉각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며
 3 물질이 격납용기에서 벗어나지
 2를 심층 방어해야 한다"고 제시

... 임무... 함, ... 임부... 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안
 을 열 배 이상 안전성을 개선해야
 주장은 나왔다. 장순홍 한국과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
 의 두 배가 넘는 2여기가 새로 건
 예상인 것을 고려하면 큰 재앙을
 인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10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력
 3, 냉각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며
 3 물질이 격납용기에서 벗어나지
 2를 심층 방어해야 한다"고 제시

... 임무... 함, ... 임부... 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안
 을 열 배 이상 안전성을 개선해야
 주장은 나왔다. 장순홍 한국과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
 의 두 배가 넘는 2여기가 새로 건
 예상인 것을 고려하면 큰 재앙을
 인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10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력
 3, 냉각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며
 3 물질이 격납용기에서 벗어나지
 2를 심층 방어해야 한다"고 제시

... 임무... 함, ... 임부... 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안
 을 열 배 이상 안전성을 개선해야
 주장은 나왔다. 장순홍 한국과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
 의 두 배가 넘는 2여기가 새로 건
 예상인 것을 고려하면 큰 재앙을
 인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10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력
 3, 냉각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며
 3 물질이 격납용기에서 벗어나지
 2를 심층 방어해야 한다"고 제시

어린이 권리 확대 제안

어린이·청소년 연대회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 대표 이오덕·이윤구·주정일·한승현)'는 지난 5일 'UN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 분과회의' 참가 보고대회를 갖고 어린이 보호 및 권리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연대회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복지의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정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의 도로점권 보장 △가정결손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기술 어린이 지원센터 설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한 범죄 처벌 강화 △아동중심의 보육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 △인권교육 실시 △교육재정 5%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가정과 사회의 어린이·청소년 학제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설립 등 UN아동권리

위원회에 요청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27가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분과회의'에 참가한 대표단(이기범 숙대 교수, 노해린 숭실대 교수, 류은숙 연대회의 실무간사)은 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한국의 민간보고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와 구체적 통계를 담았고 실천가능한 권고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 정부가 임양제도 등을 유보조항으로 둔 것은 이동을 주제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 배영환 기자

습니다

너,

고 싶어하는 이유

지 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형제들이 나를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더욱 필요로 하는 베트남에 곧 갈 계획입니다. 베트남에는 지금 1000명 정도 캠퍼에 가 빈자의 성자'로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으로

1000명 정도 캠퍼에 가 빈자의 성자'로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으로

1000명 정도 캠퍼에 가 빈자의 성자'로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으로

한 푼의 기금이 지구촌을 새롭게 합니다



경실련 배트님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동 인권의 황무지

유엔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의 비준국이지만 조약 이행에는 무관심한 우리 정부를 감시할 감시단이 활동을 개시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16개 민간단체가 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이윤구, 주정일, 한승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감시단의 첫번째 활동은 유엔에 제출할 민간보고서 작성. 11월 20일부터 나흘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의 실태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연대회의 실무대표인 이기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는 "참석국가 중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예멘에서도 아동의 권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에 놀랐다"며 부모에게 구타당하는 아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흔히 여성이 인권의 마지막 식민지라고 하지만 아동인권은 황무지라고 할 정도. 이 말은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사진 전성현기자

미니해설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90년 9월 2일 발효된 조약으로 현재 1백60여 개국에서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이다.

우리 나라 정부도 지난 91년 12월 이 조약을 비준했고 조약 44조 1항에 따라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조약 진전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명시돼 있어 지난해 11월말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조약은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천 4백만명이 죽어나가는 개발도상국의 절대적 빈곤상황과 마약, 아동학대, 소년범죄 등 선진국 아동들이 당하는 아동환경등이 다르지 않으며 또 점차 악화돼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는 사대인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조약은 또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복지, 교육 등 경제사회문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이란?

적 권리를 함께 포괄한 유일한 국제인권조약으로도 유명하다.

이 조약은 지난 59년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59년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의 평등권과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 등 모두 10조에 걸쳐 명시했었다.

그러나 이는 선언 차원에 불과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에 폴란드 정부가 아동의 권리선언 20주년이 되는 79년, 유엔 인권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 선언 10개 조항에 9개 조항을 더한 총 19개 조항으로 각국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각국의 의견을 들은 결과 국제아동의 해를 계기로 진행중인 여러 가지 연구성과를 모아 조약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고 대신 이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룹을 결성해 10여년간의 연구 성과 끝에 이 조약은 빛을 보게 됐던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운동 활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운동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이같은 운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못박은 기존 인식에서 탈피, 이들도 하나의 권리 주체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인권보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곤경에 빠졌을 때 어른들과 같은 방어능력이 없고 또한 전통적인 가족중심제에서 나타나는 천차만별의 '사랑'이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이들이 가져야 할 권리와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학대아동의 증가추세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시설 수용아동 중 90%가 양부모가 있거나 적어도 한쪽 부모가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는 전통적 가정관리의 붕괴와 함께 어린이들의 소외와 인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연대회의가 마련한 보고서 초안은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며, 국내에 어린이 권리조약을 홍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원칙과 시민권리와 자유 등 모두 5장에 걸쳐 마련됐다.

특히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분야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과 교육, 복지 등을 위한 책임은 가족,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대전제 아래 마련된 이같은 보고서 초안은 현재 우리 인식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조약 제

실제 지난해 5월 통계청 가정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율은 92년 5만7천 쌍으로 지난 20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고 혼자사는 가구도 15년사이 3.5%나 증가한 1백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소년소녀 가장도 93년도 7천3백22명으로 8년전보다 50%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이로 인한 가정환경 상실 어린이와 방치된 어린이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는 달리 최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가입 이후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에 첫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던 서부터였다.

정부는 91년 12월 이 조약을 비준, 조약 발효 2년후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지난해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이 '국제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 그룹'에 의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에 전달됐던 것.

이 단체는 한국정부의 보고서 제출 사실과 함께 96년 1월에 열리는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 본회의 전인 올 10월 사전회의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운동은 이들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나서 적극적 의미의 인권보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에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를 알렸다. 이로 인권운동사랑방이 중심이 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국내 민간단체 연합기관인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 외 3인)가 지난 3월 12일 결성됐고 수차례의 모임을 가져오

어린이도 시민적 권리 보장돼야

연대회의 보고서, 의사존중과 사생활 보호 등 비중 있게 다뤄

12조), 표현의 자유(조약 제13조),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조약 제14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조약 제15조), 사생활 보호(조약 제16조)등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마련됐다.

연대회의 실무자인 류은숙 간사는 "어린이에게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정서에 서서히 받아들여질 때 익숙치 않은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자신의 권리'를 어른들에게 대부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들도 자신이 권리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면 충분히 시민적 권리를 자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초안은 또 아동학대등으로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실태 파악과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양 및 시설 아동들을 위한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문제, 경제적 착취금지 등 복지와 보건문제, 교육과 문화 등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첫번째 준비 모임을 가진 이후 22개 단체로 불어나는 등 이에 대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어린이 청소년 관련 단체의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단체가 모여 2월 9일 첫번째 준비 모임을 가진 이후 22개 단체로 불어나는 등 이에 대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어린이 청소년 관련 단체의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올해 4가지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과 후속활동, 정부 민간단체 토론회 제안, 출판·홍보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사업은 유엔에 보낼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미 연대회의의 결성전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준비를 해 온 터라 그 초안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문제는 늦어도 6월말까지 보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속에 보고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국내에 알려나가는가 하는 방법에 있다고 관계자들은 고충을 털어 놓는다.

(백중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상황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민간단체가 연대해 마련한 이같은 보고서 초안은 정부 보고서가 법조문 나열 식에 그쳤다는 한계와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놓지 못하는 등 인권조약 기본 취지를 수용치 못했다는 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를 토대로 정부 민간단체간 토론회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대회의는 보고서 제출 이후 10월에 열리는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심사와 결과, 실현정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 아동상담소 아이들

화가 난건 아니지만 별로 신나지도 않은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18명의 어린이가 놀고 있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서울대방동)생활관. 겨우 질을마하는 들쟁이부더 열여덟살이 다 됐다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제각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블록따추기·공기놀이·고리던지기 등을 하며

소방대원에게 붙잡혀 왔다는 말에 누군가 『이런 멍청이, 경찰도 아닌 소방대원한테 붙잡혀왔어』하자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보기 드물게 학교에 가고싶다는 두 여자어린이중 은미(10·가명)는 문산에서 함께 살던 친부모가 하도 때려 도망나왔다가 경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일시 보호되고 있는 가정환경 상실 어린이들. 우리 주변에는 가정불화나 부모의 학대·무관심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많다. <金炯洙기자>



父母이기심이 「생고아」 만든다

5월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달.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만큼 보호받고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가. 또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백70개국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을 보장하려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비준했다. 이 조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육아연구소, 어린이도서관, 부스리기선교회, 한국유아교육학회, 인

권운동사랑방,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등 15개 민간단체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연대회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우리 아이들의 권리상황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실태를 바탕으로 좀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中央日報는 연대회의와 공동기획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시리즈를 마련한다. [편집자註]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보고서

中央日報·어린이 청소년권리 연대회의 공동기획



姜命順

<부스리기선교회 총무>

『엄마— 하면서 가슴에 안겨보게 소원이예요.』
『집에 가지마자 아빠가 빗자루를 들더니 계속 때리고 재떨이를 던지려다 식칼을 잡으려고...모든게 다 귀찮고 살고싶지 않아요.』 부스리기선교회가 후원하는 전국 각지의

탁아소·공부방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집」 「엄마·아빠」에 대해 쓴 글들이다. 경제기적을 이뤘다는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가정환경」을 잃은채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수없이 많다. 어린이들이 가정환경을 상실하는

것은 부모의 사망이나 사고 및 질병 때문만이 아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에 따른 가정환경 상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 스스로 가정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바람에 가정환경을 상실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소년·소녀 가장(家長) 추이를 조사한 통계청 조사(94년)를 보면 7

천 3백 39명중 부모가 사망하는 바람에 가장이 된 소년·소녀는 3천 4백 34명. 부모의 가출·이혼·재혼·복역 등의 이유로 가장이 된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보다 더 많은 3천 4백 69명에 이른다.

어느 조사결과를 보아도 가정이 파괴되는 직접 요인으로는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며 이기적으로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비윤리적 풍토가 넓게 확산되는 조짐이 완연하다. 특히 가난한 부모들의 부성(父性)·모성(母性) 포기 현상은 경제개발정책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

이혼·家出로 양육권 회피 死亡때보다 결손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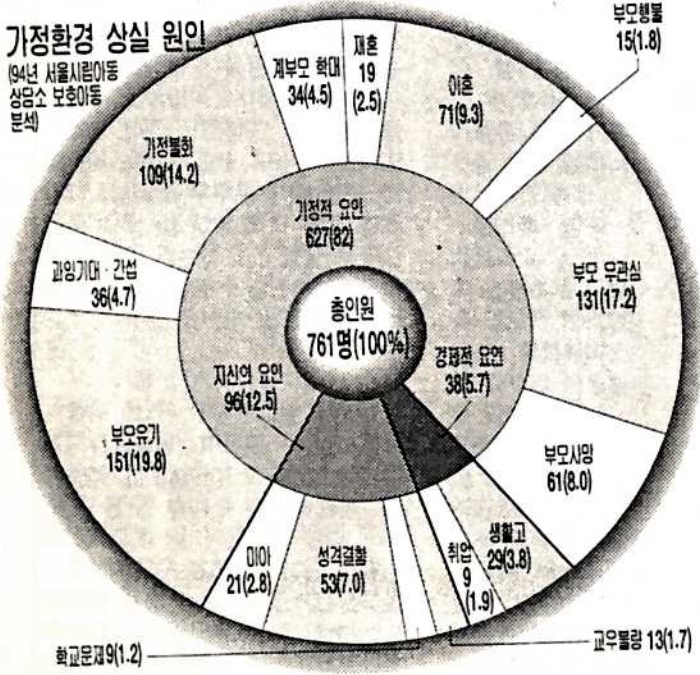
다. 농촌이 파괴되면서 이농(離農)한 도시빈민 1세대들이 「잘 살 아보세」의 꿈을 안고 일하는 사이 그 자녀들은 방치됐고, 단란한 가정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고 자라 부모가 된 세대를 역시 무책임한 부모의식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9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부스리기선교회가 조사한 결손가정 사례 분석결과는 더욱 놀랍다. 전국 34개지역 어린이 8백명 가운데 도움이 가장 시급한 「가정환경 상실 아동」의 상황을 따져보니 부모의

손질이 가장 필요한 7, 8세 이전에 부모가 가출한 경우가 약 55%. 이 어린이들이 결손상태로 방치돼온 기간이 5~14년인 경우도 49%에 이른다. 이런 어린이

들은 친척이나 교회·사회복지관 등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 뿐 가정환경이 상실된채 철저히 소외돼온 셈이다. 부모의 가출로 실질적 가장노릇을 하는 어린이들은 주민등록상 부모가 현존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못해 일부 민간단체들의 얼마 안되는 후원금으로 근근이 살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는 초·중학생이 3천16명으로 1년전보다 약 27% 늘었으며, 그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자녀가 가장



「커서 뭐가 되든 알게 뭐예요」

「시간을 보내고」있다. 「지갑에 넣어둔 반지가 없어졌다고 할머니가 막 패잖아요. 우린 손도 안됐는데... 더이상 구박받기 싫어서 나와버렸죠 뭐.」 「우리」란 열세살된 소년과 두살 손위인 누나. 아버지가 돌아가시

찰관 아저씨를 만나 상담소로 왔다고 했다. 지난 한햇동안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가출해 무작정 떠돌며 검팔이·앵벌이·구걸·절도 등으로 생활하다 이 아동상담소로 오게된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 부모학대에 못견뎌 家出 작년 761명... 60%만 가족품으로

고 어머니가 가출한뒤 이들 남매를 돌보아온 할머니가 「마귀 할멈」같다고 했다. 아동상담소 앞뜰의 싱그런 라일락꽃 향기와 너무 대조적으로 건조하다 못해 가시가 박힌듯 따끔거리는 말투다.

『학교는 가고싶지 않아요. 노래방·전자오락실·롤러스케이팅장, 뭐 그런데나 실컷 다녔으면... 이 다음에야 뭐가 되든 알게 뭐예요. 꼭 하고싶은 일도 없는 걸.』

강생원에서 탈출했다는 정호(14·가명)의 무용담(?)에 문득 눈빛을 밝히는 어린이들. 편의점에서 돈 안내고 통닭을 먹으려다

년은 7백61명. 그 가운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약 4%뿐이고 37%는 친부모가 살아있다. 또 편부(15%), 편모(13%), 부모행방불명(6%), 실부계모(實父繼母·9%), 실모계부(實母繼父·2%) 등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도 직접 낳아준 어른이 생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이 평균 3주일정도 이 아동상담소에 머무르다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약 60%인 4백61명. 나머지는 주로 보육원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옮겨가거나 적절한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고, 극소수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金敬姬기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해준다.

어린이-가족부 장관과 함께 「바네움부데」라는 어린이 자문기관을 두고있는 노르웨이의 노력은 귀감이 될만하다. 어린이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통화요금만 내고 「바네움부데」로 전화해 자신의 고민을

달아놓거나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법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중요 안전들은 해당 한차례 TV 공개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처럼 미래의 주인공들이 좀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배려를 한국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어린이福祉」 무관심속에 방치

워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 보고서

中央日報,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동기획

어둠살 보람이는 말을 못한다. 「말문이 좀 늦게 트이는 아이」쯤으로 생각하며 세살까지 기다리다 좀처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는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혼치않은 상담기관이며 교육프로그램을 기웃거리다 종합병원을 찾은 것은 보람이의 다섯번째 생일무렵. 귀에 이상이 있는 것같아 이비인후과로 갔지만 이상이 없었고 지능검사를 해봐도 문제가 없었다.



李 容 教

<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하는 장애아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장애아는 일찍 발견해서 특수한 교육과 적절한 재활교육을 익혀 홀로 설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모든 선진국은 이처럼 기본적인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는 서울 고척국교앞에서 질주하는 차량을 피해 학교로 향하는 어린이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이들 책임일까.

<張文起기자>

장애아 대다수 교육기회조차 없어 곳곳 事故위험... 국가차원 대책시급

어렵사리 자폐아 교육기관을 찾아내 반년가량 기다린 끝에 소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매달 드는 비용은 30여만원. 사실상 자폐아는 7세이전에 전문적인 조기교육을 받지않는 한 치료가 거의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부모로서 일말의 희망을 버릴 수 없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지만 늘상 누군가 원망스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좀더 일찍 자폐증 진단을 받기만 했더라도...

장애어린이들의 교육기회는 매우 제한돼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아동들 가운데 12.6%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을 뿐 대다수 장애아들은 교육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들은 원래 장애의 종류나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맹아학교에서 농아학교로 특수교사들을 순환보직시키는 등 전문화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잘못된 경쟁의 논리는 정상아동보다 한결 특별한 보충을 필요로

일을 국가와 사회가 맡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아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얼마나 방치돼 있는가. 장애를 예방·치료하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본인부담률이 과중해서 정작 의료보험 혜택이 가장 절실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는 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예방서비스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또 소아과 진료과목이 세분되지 않아 전문적 진료를 받기 어렵다. 현재 소아과 전문의는 어린이에 대한 일반의와 색안경, 수안경,...



소아내과·소아피부과처럼 각 진료과별목 전문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최근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수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대구 가스폭발사고처럼 수많은 중·고생들이 통학길에 희생되는 경우 말고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업·취업·취혼 등 다양한

사고 있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5~14세에서 사망 원인의 45.5%가 「불의의 사고」. 성인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의 11.9%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것과 비교할 때 약 4배나 더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는 사망 8백45명, 부상 4만4천여명.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37.5%

가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어린이의 활동반경인 가정 주변과 학교까지의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학교주변 통학로를 「학교구역」으로 설정,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며 주차를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줘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국가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 당사자의 운명이라며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 놀이터 확보·안전횡단교육등 실시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들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운동」을 시작한 어린이교통안전협회·교통안전공단·상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1>어른들의 무지 일깨우기=무단횡단 등 어른들의 무심한 행동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부추긴다는 점과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

<2>안전한 도로횡단 실습교육=어린이 교통사고의 약70%가 도로횡단중 일어난다. 따라서 ▲우선 멈춘다 ▲좌·우의 차를 본다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차량의 멈춤을 확인한다 ▲차를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건넌다 등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을 가르친다.

알록달록한 갖가지 장난감과 책, 등근 책상과 어린이용 작은 의자 등이 곳곳에 놓인 실내에서 선생님과 노래하고 춤추는 어린이 6명. 얼핏보면 선진국 유치원처럼 느껴지는 아늑한 교실에서 어린이들은 나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치료 교육을 받고있다. 언어·청각·심리·음악치료 등을 실시하는 한국어린이유영회 치료교육연구소의 「조기교육실」.

이 어린이들은 자폐증, 언어 및 청각장애, 몽고증 등 저마다 한 두가지 장애를 가진 만큼 그 또래의 소위 정상어린이들에게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될 배변훈련이나 옷 단추끼우기 등 매우 기본적인 신변처리 훈련까지 해야한다. 자녀들이 프로그램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현관 소파에서 기다리는 '부모들도 사뭇 초조하고 그늘진 표정이다.

전국 특수학교에 설치된 1백21개 특수학급에서 조기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어린이(대개 5세)는 94년 현재 1천1백87명. 5세 장애어린이를 1만5천3백명(63만명의 취학대상자 가운데 2.44%)으로 추정할때 대상자의 8%만이 무상교육을 받고있다.

장애 조기치료 시설 "태부족"

대상자의 겨우 8%가 무상교육 혜택 대부분 시기놓쳐 "평생 그늘"속으로

이밖에 4천3백명 정도가 특수교육·치료교육·요육교육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1백92개 사설 기관에서 매달 20만~50만원 정도를 내며 조기 특수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2~3개월씩 차를 기다린 끝에 고도의 첨단치료기기와 교육시설, 전문치료·교육인력을 갖춘 이 치료연구소를 이용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행중 다행」인 셈이다.

그러나 취학연령이 지나면 이 정도의 본격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만한 특수학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으로 이민가는 경우도 상당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0세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장애아 조기교육을 하고 스웨덴은 4세부터 정부가 장애유무를 확인해 취학전 특수조기교육을 받게한다. 장애아일수록 빨리 발견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 그 효과가 크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진학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자폐증이라고 찾아오는 어린이의 90% 정도가 오진(誤診)으로 판명됩니다.」 이 연구소 김양희(金良熙)박사는 정확한 조기발견부터 문제가 많다고 안타까워 한다. 특히 일찍 발견해 약간의 특별교육만 하면 1백% 완치되는 난독증(難讀症)의 경우 정박아로 알고 자포자기하는 바람에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金敬姬기자>

<3>어린이 놀이터 확보=안전한 놀이터 부족으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차량 1대를 팔때마다 1만원씩 기금을 적립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간을 계속 늘린다.

<4>무단횡단 차량·난폭운전자 고발하기

<5>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학교구역(School Zone)」설치 및 효과적 운영 ▲국민학교 정규과정에 교통안전교육 추가 ▲각 시·도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6>교통사고 유자녀와 자매결연맺기=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 가정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준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보고서

中央日報,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동기획

< 3 >

『교사로 일하는 딸 대신 네살짜리 의손녀를 돌봐주고 있는데 이젠 너무 힘이 부쳐서...』

『자꾸 치솟는 전셋돈을 감당할수 없어 조그만 가내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나마 일손이 잡힐 않아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오전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점심을 챙겨먹었는지, 숙제를 했는지, 오락실에서 놀고있는지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지만 아이가 두살때까지 돌봐주던 친정언니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대학 강의도 못나가게 됐으니...』

부산대가 지난 3월 보육종합센터를 개원한 이래 어린이들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박한 사연들.

어렵사리 얻은 일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발 취학 전 자녀를 맡아달라는 식의 호소과, 「마음놓고 맡길만한」어린이집을 찾아 부산대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니 우리 아이만은 꼭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권리주장과 등 각양각색이다. 어쨌든 부모가 일하는 사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아줄만한 시설이 얼마나 절실하게 아쉬운지를 실감케하는 사연들이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문을 연 보육종합센터의 어린이집이 돌보고 있는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국민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 2백명. 그중 교직원 자녀는 35%이며 나머지는 대학주변 맞벌이가정 어린이들인데, 집집마다 절박한 사정으로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슬한 어린이들 중에는 특히 만3세미만이 많다.

어릴수록 보육교사의 손이 더 필요하고 별도의 시설도 있어야 하므로 일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는 3세미만 어린이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흔한 까닭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양육문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대학원생 부부 각자가 전문직을 가진 부부 등 학



林 再 澤

<釜山대학교·유아교육>

계층의 고민거리가 되고있다. 오랫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됐던 보육문제는 80년대 중반이후 여성계와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로 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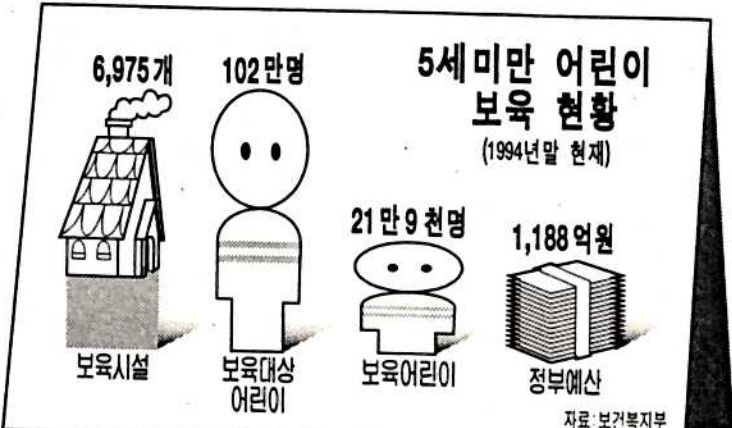
서 1천1백88억원으로 6.2배가 각각 늘었다. 경제활동 여성인구가 4백만명을 헤아리면서 맞벌이가정의 사회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마련돼야 한다는 예기다. 대학입시를 둘러싼 교육열이 뜨겁다지만,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열도 상당하다. 보육시설

서울독산1동 새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하는 엄마들」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金相旿기자>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곳 없다

맞벌이 늘어나도 보육기관 제자리 보육료 비싸고 환경·시간도 큰 문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최근 5년동안 외형상으로는 만만찮게 발전했다. 90년부터 94년 사이에 보육시설은 1천9백19개소에서 6천9백75개소로 3.6배, 보육아동수는 4만8천명에서 21만9천명으로 4.5배, 연간 정부예산은 1백91억원에

커진 탓이다. 그런데도 94년말 보육아동수는 전체 대상 1백2만명의 약21%에 불과하다. 영유아보육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보육시설을 크게 늘리면서 보육의 질도 한결 높여야 한다. 적어도 부모가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여건이

이 안전하고 쾌적한가, 교사 한명이 돌봐야하는 어린이는 몇명인가, 그 보육교사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보육프로그램과 급식·간식의 식단은 어떤가 등 부모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 수준을 따진다.

부모들은 또 직장생활에 무리없을 정도의 충분한 보육시간, 가계에 너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보육비용, 자녀를 데리고 오가기 쉬운 교통편, 만3살 미만의 어린이도 마음놓고 맡길만한 보육여건 등에도 매우 신경쓴다. 물론 이런 요구를 두루 만족시킬만한 시설은 결코 흔치않다.

『두살과 네살짜리 남매를 놀이방에 보내는데 매달 30만원이 넘게 드니 월급이 절반도 안남는데다 오후5시까지만 맡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할 판』이라는 어머니도 딱하다. 그런가 하면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

이나 법인에 속한 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사 인건비라도 지원해주지만, 소규모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아무 지원없이 꾸러가야 하므로 현재의 보육료로는 좀더 나은 시설을 갖추기는 커녕 교사 인건비 대기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한다.

사실상 부모님이 마련해둔 결혼비용을 가불(?)해 부산 달동네에서 3년째 놀이방을 운영하는 두 젊은 교사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맞벌이 부모들이 방치할게 뻔하다」며 어떻게든 계속 꾸러가려 안간힘을 쓰고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와 그 질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가는데 비해 그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엄마 못잡은 사랑 베풀죠"

서울 禿山洞 「새터 어린이집」

『아유, 우리 지영이 오늘도 신나게 잘 놀았구나!』 온종일 헤어져 지낸 9개월된 딸이 환한 웃음으로 엄마를 반기는 순간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잊은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엄마.

아이가 재롱 피운 이야기를 낱말이 전해주는 보육교사의 친절한 얼굴이 정겹기만 하다.

서울 구로구독산1동 소규모 공장지대 주변에 자리잡은 「새터 어린이집」은 생후 5개월부터 만3세의 어린이 24명을 7명의 보육교사들이 엄마를 대신 정성스레 돌보는 곳이다.

3세미만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탁아시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게 된 「일하는 엄마」들은 더할나위 없는 행운(?)으로 여긴다.

물론 가정주부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놀이방도 더러있지만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돌봐주는 이 어린이집처럼 전일제가 아니므로 출·퇴근길에 데려왔다 데려가기 어렵다. 또 보육료도 한 달에 25만~30만원 정도로 어린이집보다 비싼편.

이 어린이집은 법인으로 등록된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가 하루8백원씩 간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2세미만이 월 17만원, 만2~3세는 13만5천원이다.

더구나 제대로 훈련된 이곳 보육교사들이 「엄마 못잡은 사랑으로」돌봐준다는 소문 때문에 탁아 신청을 해도 6개월이상 기다려야하기 일쑤.

1년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은 보육교사들의 초임은 37만원. 『여간한 사명감 없이는 그 힘든 일을 웃는 낮으로 기꺼이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남미영(南美英·34) 원장의 얘기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업

全日制에 비용도 저렴

「일하는 엄마」에 큰 도움

마들의 직업은 대개 소규모의류관련업체의 봉제사나 미싱사로 월수입은 50만~70만원 정도.

자녀양육 문제만 없다면 좀더 보수가 나은 대기업체에서 일할수 있는 경우도 흔하지만 대개 직장타아소가 없으므로 자녀양육에 무리가 없는 어린이집 부근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南원장은 일하는 엄마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안전·영양 등 기본적인 요구와 권리를 희생당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좀더 충분한 보육시설과 사회적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金敬姬기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돼야

보육 서비스의 기회를 늘리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서울시의 보육시설 정책 개선계획에 관해 참여민주당의 시민연대가 마련한 토론회(10일·서울 대화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됐다.

1)보육위원회의 역할을 보육시설 설치지역과 위탁 선정,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및 조사·연구기관으로 강화한다. 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과 관련된 행정전문가·어린이집 운영자·건축가·교수·시

민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과 국·공립 시설의 차별을 줄인다.

3)위탁경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위탁 결정과정에서 평가까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4)실질적 공공보육이 이뤄지도록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보호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기출 총동경험" 32%

「어린이 의식조사」 1면서 계속

아버지와 거의 대화 하지 않는다는 어린이가 10명중 2명꼴(서울 14.5%, 농촌 19.0%). 어머니와 거의 대화 없다는 어린이까지 있다(서울 4.0%, 농촌 10.0%). 선생님과의 관계는 더욱 심각해 서울 어린이의 52.0%, 농촌어린이의 25.5%가 거의 대화 하지 않고 있다.

공부하라는 등쌀에는 좀 시달리는가. 학교공부·과의 공부를 제외하고도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서울어린이 3시간51분, 농촌어린이는 2시간50분. 적지 않은 시간을

0%). 특히 여학생의 경우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고백이 서울 26.0%, 농촌 30.0%나 된다. 부모들이 무심한 가운데 어린이들은 생활에 피곤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또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공부를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22.5%)다.

그 다음으로 용돈을 올려주고(16.3%), 사고 싶은 것을 사주고(16.0%), 편안하게 놀게 해주고(13.8%), 하고 싶은 일 하게 해달라고

부모와 대화 하루30분 불과 존경하는 人物 대상 못찾아

성적을 위한 공부에 매달려 있다. 성인근로자 평균 근무 시간을 웃돈다. 게다가 과의 수업도 해야한다. 서울어린이의 94.5%, 농촌어린이의 58.0%가 여러 종류의 과외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의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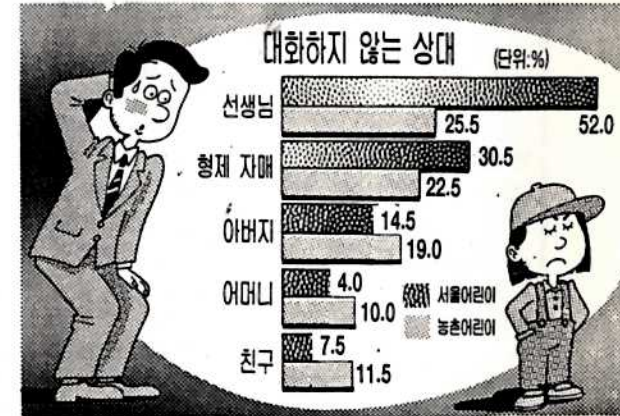
현재 서울어린이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성적(43.5%). 그 다음 고민은 동성 친구와의 관계(14.0%), 가정문제(10.0%)다. 농촌 어린이 역시 학교성적이 최우선 고민거리기는 마찬가지(59.0%).

이 때문에 어린이들의 심리적 갈등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매를 맞아 봤고(서울 92.5%, 농촌 82.5%), 10명 중 3명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껴봤다고 한다(서울 39.5%, 농촌 37.0%). 또 비슷한 정도의 어린이가 가출충동을 경험했다(서울: 32.5%, 농촌: 32.

(8.5%)주문한다. 모두 현실조건으로 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표현이다.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요구도 높다(8.0%).

존경하는 인물로 서울 어린이(48.0%)와 농촌어린이(44.0%) 거의 절반이 부모를 들 뿐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는 서울 어린이의 4.5%, 농촌어린이의 14.5%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들었다. 부모·선생님 이외에는 에디슨·세종대왕·유관순·이순신·신사임당·아인슈타인·링컨·

<조사취지> 中央日報는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 어린이의 의식과 권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올해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의 「국제신문및 어린이 인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나폴레옹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모두 외국인물이거나 역사 속의 인물이다. 현존인물로는 지방어린이들의 2.5%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드는 정도다.

어린이실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사는 보고서 내용중 일부다. FIEJ는 신문의 윤리와 경제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수준에서의 신문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창설된 신문관계의 국제기구다. 현재 3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회는 NIE(신문을 활용한 교육)를 주도하고 있다. <조사방법> ◆조사일시=4월17일~5월2일 ◆조사방법=1대1개별면접 ◆조사대상자=국민학교 4, 5, 6학년 남녀 어린이 ◆조사대상자수=서울 2백명, 농촌 2백명

경쟁논리에 「教育權」 무시된다

워리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보고서

中央日報,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동기획

작년 이맘때 농촌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학교 유리창을 2백여장이 나 깨뜨리는 등 소동을 부렸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한계상황같은 학교생활에 억눌린 학생들의 분노와 반항의 대폭발. 앞날에 대한 소망이 농촌학생이라고 다를 것 없건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학교여건과 비인간적 대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학생들은 그 좌절과 분노를 그렇게 쏟아냈던 것이다.

학교차는 도시와 농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의 포괄적 현실이다. 일반학교와 직업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학교, 학업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소위 정상학생과 장애학생,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중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부당한 대우 가운데 「차별」을 가장 많이 꼽을 만큼 온갖 종류의 차별이 직접·간접

으로 학교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제도권내 학교로 수용하는 비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교육소비자의 절반도 아우르지 못하는 대학입시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서 비인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따져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개인차가 전혀 배려되지 않는 과밀교실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정서·행동·학습장애 때문에, 또는 숨막히는 교육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육권을 영영 앗아버리는 사회라면 현대속의 중세, 문명속의 암흑이라는 조롱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李 起 範
<淑明女大교수·교육학>

사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거스르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체벌은 학교현장의 대표적 인권침해. 교육개발원이 국민학생 2백11명을 면접조사한 바에 따르면 30%이상의 어린이가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과 잘못이 없어도 학급 전체를 벌세우는

단체기합」을 학교생활의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체벌은 더 가혹하고 빈번해져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한다. 물론 교육차원을 벗어난 체벌 자체가 사라져야 하지만 폭행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통제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폭행교사에 대한 배상



방립방적이 운영하는 산업체 부설학교인 동명상고생들의 컴퓨터교육시간.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권과 교육기회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金允澈기자>

청구등 6건의 사례중 학부모가 승소한 경우는 단 1건.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관행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늘리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법. 유엔의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칙을 어겨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경우에도 학생이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할 뿐더러 학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징계는 그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마땅하다.

사소한 실수로 가벼운 징계를 당한 학생이 갈곳이 없어 하릴없이 해마다가 엄청난 탈선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차별과 體罰 예사...人權의식 아쉬워

美 「버치우드」 특수학교의 경우

미국 뉴욕 근교 록펠랜드 카운티의 버치우드학교는 정서·행동·학습 장애가 심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치료·교정하기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82명을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과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전문가·사회사업가·간호사·상담전문가·위기관리담당교사 등 25명의 교사와 전문가들이 돌본다. 과(過)행동증·주의산만·등교거부·감정절제곤란 등 제각기 다른 이유로 일반학교에서는 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학생들 인만큼 학급당 인원수가 8명을 넘지 않고, 학급마다 담임외에 보조교사가 있다.

학부모와 학생을 면담한 뒤 그 학생을 버치우드같은 특수학교로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지역별 특수교육협회. 특수학교에만 다니는 학생 외에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특수학교에

"사회의 낙오자 안되게 최선"

학습장애 극복위해 전문가들 구슬땀 한학급 8명... "홀로서기, 세심한 도움"

서 특수교육이나 치료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반반씩 다닐 수도 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학교로 복귀하는 것이다.

버치우드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음악·미술·운동 등을 이용한 치료요법, 특별 언어교육, 개인별 직업준비교육, 개별·집단·가족상담, 여름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하루중 반나절은 학교에서, 나머지 반나절은 직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에서 보수를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는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동료와 협동하는 자세 등을 익혀 사회인으로 홀로 설수 있는 준비를 한다.

교육비는 학생이 속한 교육구청이 부담한다. 학교 주변의 전직 교사나 의사 등 자원봉사자들까지 가세, 사회의 낙오자를 한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尹汝淑 <前 中央日報 주부통신원·뉴욕주 재판 거주>

「어둠이 온 눈빛이 Y형질」 이기훈

「아동학대」 친부모가 절반 차지

워리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보고서

中央日報,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동기획

『아빠가 너무 때려서 엄마가 집을 나갈 때마다 저는 죽은거나 마찬가지예요. 팔을 물어뜯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다 머리를 쳐박기도 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엄마한테 천화를 걸게 하고는 아빠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온갖 욕을 하면서 그걸 엄마한테 다시 되풀이하라는 거예요.』(11세 남자 어린이)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엄마가 잠자리에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거의 날마다 두세차례 나...』(중1 남학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는 정신나간 사람 또는 친부모가 아닌 어른들이나 저지르는 짓으로 여기지만 결코 「특별한 일부계층」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85~93년에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2백31건 가운데 친아버지(42%)와 친어머니(7%)가 학대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다. 딸을 때려 죽인 치과 의사 아버지,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상습적으로 때린 택시기사 아버지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학대사례들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가정의학회 회원과 소아과전문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로 심하게 다친 67건 가운데 두개골을 포함한 신체부위 골절이 16건, 복강과 뇌출혈이 8건,

무방비 폭력... 비밀신고 제도화 해야

사망이 6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 제도나 법 체계 안에서는 부모의 요청이 없는 한 가족내 아동학대에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아동복지법 제18조가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 그러나 그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벌칙도 미약하다. 더구나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없어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한건도



盧惠璉 <승실대교수·사회사업학>

보고된 바 없다.

이런 상황인지라 공무원이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가정에 들어가면 「가택침입죄」, 데리고 나오면 「유괴죄」를 범하게 된다.

학대받는 어린이는 물론 어느 사회에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유무와 서비스가 그 사회의 인권존중·사회복지·

사회 의식 수준을 드러낸다.

아동학대에 관한 선진각국의 연구자들은 신체적 학대가 부모·보호자의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밝힌다. 최근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현상에 따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라든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채 자녀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히기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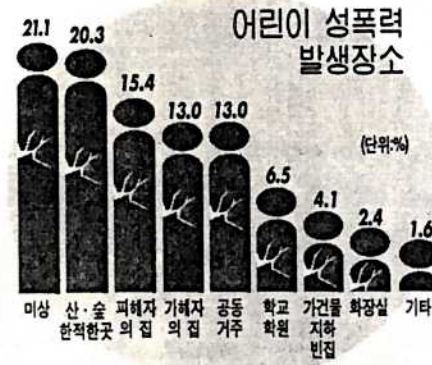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는 「집안

문제」니까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부모나 그밖의 가족들이 제 기능을 할수 없을때 사회가 적절히 개입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가족 전체의 화목을 도울수 있을때 진정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된다.

아동학대를 예방·발견·치료하기 위해 우선돼야 할 것은 아동학대의 정의부터 확실히 내리는 일이다.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또 적절한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 정의가 확실해야 한다.

아동복지법도 시급히 보완돼야 할 점들이 많다. 현재 보호자의 신고 없이는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사회의 개입이 불가능한데,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교사·사회복지사·의사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영하고있는 비밀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林純伶 총무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라는 우리나라에서 13세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약 30%나 된다면 믿어주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순령(林純伶·30)총무는 어린이가 끔찍한 성폭력을 당해도 상담기관을 몰라 상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곳이나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한다.

『경비원으로부터 거의 1년동

“성폭력 대상, 어린이가 30%”

엄청난 후유증... 협박에 질려 말도 못해

안이나 이루 말할 수 없을 성폭행을 당했던 여섯살짜리 어린이는 가해자와 같은 모양의 신발을 신은 사람만 봐도 자지러지게 놀라고, 성폭력을 당했던 화장실에는 한사코 안가려들며 배란다에서 용변을 보는 등 상처와 후유증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 생각하면 정말 기막힌 일이지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적을수록 자녀가 성폭행 당해도 그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마련. 가해자가 아버지·오빠·삼촌 등 함께 사는 가족이거나 이웃 등 뜻밖에도 너무

가까운 인물이 많은데다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이 두려워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林총무는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인격교육의 일부로 계속돼야 하는데도 성폭력특별법에 성교육 의무조항이 삭제돼 너무 아쉽다고 말한다. 직장내 사원교육이나 주부대상 사회교육 등을 통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의과대생이나 사범 연수생들에게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金敬姬기자>

청소년들 갈만한 놀이공간이 없다

우리아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보고서

中央日報,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동기획

『공부하기 싫고 짜증날 때마다 책을 오락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속상하면 술 마시잖아요.』

서울의 한 「공부방」에서 모두 숙제를 하거나 책읽으며 공부하는 사이 혼자 초점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성준이(국6). 교사가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1백원만 있어도 반나절쯤 오락기에 매달릴 수 있는 「오락 도사」(?)다. 여섯살 때부터 맛벌이 하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7년째 오락실을 개근하다시피 했는데 오락실에만 있으면 근심걱정을 잊는다.

「공부방」은 소위 달동네로 불리는 도시 빈민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화실조」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마땅히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아이들이 유해업소 주변을 맴돌거나 본드흡입 등의 위험천만한 비행·탈선을 하지 않도록 공부방 교사들은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불건전한 향락문화에 유혹돼 경험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록카페에서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매력이지. 춤추고 소리치며 담배를 피우고 술마셔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 아주 편하거든요.』

며칠간 공부방에 나오지 않던 정호(중3). 『공부하기 싫고 부모님 잔소리도 성가시면 그렇게라도 풀어야 하지 않느냐』며 사뭇 당당하다. 신촌·돈암동·압구정동·홍대입구에 가면 록카페 말고도 소주방·비디오방·만화방·노래방·당구장 등 기분이 통하는 「우리끼리」 어우



任惠淑

<서울지역 공부방연합 공동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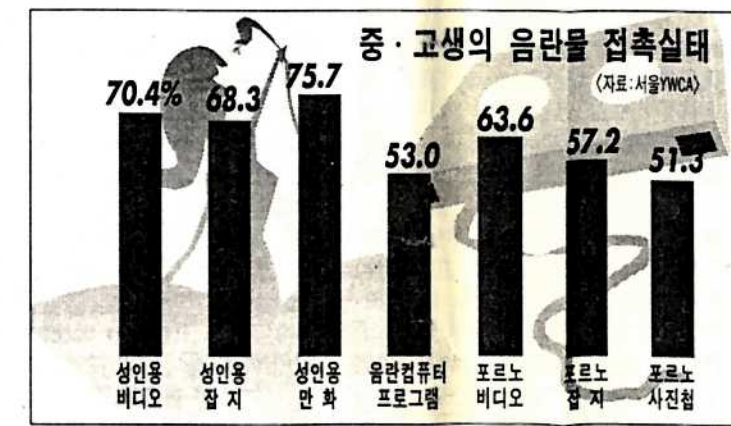
를테가 많아 마음에 속 든다. 칸막이가 설치된 방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비디오를 얼마든지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전자오락실.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빼앗긴다는 사실 외에도 내용의 폭력성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주변 곳곳엔 퇴폐·향락시설만 건전한 「포레 문화」 익힐 환경 아쉬워

볼 수 있고, 노래방의 화면도 훨씬 「화끈한 게 많다」는 제2, 제3의 정호들에게 꼭 그런테를 가야겠느냐고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 포레들이 마음놓고 즐기며 나무랄데 없는 포레문화를 익힐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도서관·공연장·박물관·청소년회관등 바람직한 여가공간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찾기 어렵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만 해도 여관·여인숙 3백12개, 만화가게 1천1백41개, 당구장 86개, 전자오락실 3천1백10개등 5천개에 가깝다(93년 13대 정기국회 감사자료). 이 유해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복지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학대및 흡사행위 3백73명, 유흥업소 출입 목인 7천6백22명, 남녀혼숙 목인 4백82명, 전자오락장 출입 목인 3



천 7백70명, 불법만화및 불법비디오 판매·대여 4천1백29명등 2만6천3백여명이다(92년 검찰청). 건강한 여가생활로부터 소외돼 있기는 중산층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방과후 학원이나

게 나타난다. 계층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맹렬히 파고드는 것은 영상매체. 그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음란물이 판치는 컴퓨터게임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칼로 몸을 자르고, 사람을 불에 태우고, 사지를 발기발기 찢고...

지금까지 국내에 보급된 컴퓨터 게임기만해도 업소용이 2백50만대, 가정용이 2백만대를 각각 넘어섰으며 여기에 개인용 컴퓨터 보급대수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온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이 된 셈이다. 그러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그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은 어느모로 보든 우려할 만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YWCA가 중·고생들의 음란물 접촉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한 컴퓨터물이 53%며 비디오가 64%. 음란비디오를 본 남학생의 48%와 여학생의 18%가 본대로 행동하고 싶었

어린이도서연구회 독서의식 조사

폭력·음란물 투성이의 만화·잡지·비디오·컴퓨터게임의 홍수 속에서 서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해도 너무한다」고 할 정도의 책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서점에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서울·인천·대구·부산 지역 5백70명의 4~6학년 어린이와 4백1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점에서 팔고있는 책들이 재미있고 내용이 알차서 좋다는 어린이는 약 15%뿐. 대부분의 어린이가 「폭력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웃기는 책이 너무 많아서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된다」 「동네 서점에는 볼만한 책이 없다」 나쁜 책은 못사게 말려야 하는데 한권이라도 더 팔려고 내버려

「마음의 양식」도 안심못한다

「현재市販책 유익하다」 반응 15%뿐 어린이 위한 체계적 독서지도 시급

둔다 「시시하다」 「딱딱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들도 흥미위주, 지나친 폭력,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귀신 이야기 등 공포물과 상업적 저질만화 공해, 포천천·포동이시리즈·민지일기 등 TV프로그램에 맞춘 번역기획물 홍수 등을 우려한다. 어린이들이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가운데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를 잊을 수만 있다면」 『메밀꽃 필 무렵』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죄와 벌』 등 성인 및 청소년 도서들을 추천한 케이스가 상당수.

그런가하면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권하고 싶다는 책을 가운데 『테스』 『주홍글씨』 등 세계명작과 『YS는 못말려』 『청춘예찬』 『백마타고 온 사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 어린이들 수준에 맞지않는 베스트셀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어린이들의 독서지도에 얼마나 서툰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 전문서점과 어린이도서관 확충 ▲학교교과과정을 이용한 체계적 독서지도 ▲저질 출판물에 대한 규제 및 불매운동 ▲믿을만한 「좋은 책 목록」 제작·배포 등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金敬姬기자>

으며 남학생의 7%는 그대로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유해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가정이 만연한 퇴폐향락문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학교나 사회가 이들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윤리감을 오염시키고 폭력적·반사회적 성격과 행동을 조장하는 퇴폐·향락 생활환경부터 바꿔줘야 한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생활이 넉넉하건 어렵건, 가서는 안될 곳, 해서는 안될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여유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학원·과외·시험보다 한결 시급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어린이도 독립된 人格體" 인식 절실

中央日報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 공동기획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시리즈 마지막회는 관계 전문가의 좌담을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종합진단하고 그 대책을 모색한다. 좌담에는 연대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선명회 이윤구(李潤求)회장·아동문화운동가 이오덕(李五德)씨와 이기범(李起範)숙명여대 교수(교육학)가 참석했다. 【편집자註】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UN아동권리위원회 민간 예비보고서

中央日報·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의 공동기획

李起範교수=「요즘 아이들」이라 말할 때 흔히 「버르장머리 없는 말썽꾸러기」랄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풍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5개 민간단체들이 파악한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를 보면서 「요즘 어른들」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李五德=어린이권리조약은 유엔 총회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채택됐고, 전세계 1백70개국에 비준함으로써 호응 회원국도 가장 많은 국제조약입니다. 한국도 91년에 비

子女를 소유물로 취급... 人權 무시 예사 고통받는 아이들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준했지요. 하지만 그 조약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李起範=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기보다 일종의 소유물로 여기는 잠재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권리」라는 말조차 어색하게 느낍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라며 시험성적·학원·과외공부 따위로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나, 이혼할 때 서로 자녀를 돌보지 않겠다며 「부모 있는 고아」를 만드는 세태 역시 아이의 고유한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죠.

李五德=우리는 아이들의 솔직한 표현조차 막을 정도로 아이 사랑에서 투박합니다. 어린이란 무엇보다 자

유롭게 말하고, 쓰고, 그릴 수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든요. 학교나 가정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이름 밝히지 말고 쓰라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글을 쓰는 아이들이, 이름을 밝혀야 하는 일이나 생활문을 쓰라면 그야말로 틀에 박힌 죽은 글을 쓰는게 누구 때문입니까. 해마다 자살하는 1백20여명의 아이들도 속시원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기회만 있었다면 아까운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 권리조약에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가 명시돼 있죠.

李潤求=조사대상 아이들의 70%가 제일 바라는게 「부모·선생님 없는데서 실컷 소리지르는 것」이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또 그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부모와 상의한다는 응답률은 11개 국가중 한국이 가장 낮는데 자녀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놀랍게도 한국 부모가 제일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모르면서 왜나 잘 위해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너무 부족한 탓이기도 하겠죠. 최소한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일찍까지 퇴근해 자녀들과 속깊은 얘기도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李起範=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육현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학·퇴

어린이·청소년 권리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좌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李潤求회장·李五德씨·李起範교수.

<金炯洙기자>



UN아동권리위원회 제출예정 민간보고서

"아동권리 死角지대 많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오는 6월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측 민간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정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가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 이혼의 전제조건으로 양육비 부담 등 양육의무 이행 및 친권행사자를 지정토록해야 한다. 일정연령 이상의 어린이를 입양할 때는 어린이의 동의를 받는 등 입양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부모나 미혼모 등이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내지 실비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환경 상실」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하다.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어린이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체벌·성폭력 등을 막아야 한다.

가정없는 아이에 무관심 | 유해노동·약물등에 방치

다. 청소년의 구금장소를 일반 유치장·구치소·교도소가 아닌 「소년구치소」나 소년

원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5인이하), 시간제 작업장은 법의 사각지대다. 남녀차별을 없애는 평등교육과 진로계발교육으로 직업선택과 준비를 도와주어야 한다.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오·남용하는 약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치료 시설이 적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며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치료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태부족하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놀이터·공연장·전시장·공원 등이 너무 적을 뿐더러 그나마 극소수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행사와 프로그램 및 공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 <敬>

에 귀 기울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李起範=어린이집 교사들중 72%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제도를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신고제도에서조차 어린이

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더욱 미흡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어린이학대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교과과정에 성교육을 의무

화하자는 관련단체들의 주장이 성폭력특별법에 반영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인 신고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李五德=어린이권리조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란걸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리=金敬姬기자>